제894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, 전기요금산정기준,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및 준비기간 연장요건 강화(강화) ㅇ (자기자본비율)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이 20% 이상일 것 ㅇ (납입자본금)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(총사업비의 1.5% 이상) ▶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, 전기요금산정기준,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전체 2. 풍력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및 유효기간 등 변경(강화) ㅇ 데이터 계측 기간에 대한 규정 명시, 유효지역 분류 및 면적 재정립, 유효기간 신설 등 ▶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, 전기요금산정기준,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전체	1.중요 2.중요
2	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 노외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변경(신설) ㅇ 경사로 시·종점에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에서는 8.5퍼센트 이하, 곡선 부분에서는 7퍼센트 이하인 완화구간을 설치하도록 규정 신설 – 보행로 등에 접한 모든 오르막 경사로 종점에 3.2m 완화구간 설치 – 주차대수 50대 이상 주차장 볼록형 경사로 시·종점에 1.7m 완화구간 설치 – 주차대수 100대 이상 주차장 오목형 경사로 시·종점에 2.0m 완화구간 설치 ㅇ 주차장 경보장치 설치 목적, 위치, 성능기준 등 세부기준 신설 ▶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· 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 강화(강화)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시행자 중 특수목적법인(SPC)의 경우 공공부문이 50% 이상 참여해야 하는데, 공공부문 범위에서 기타공공기관 제외 ▶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· 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3장	1.중요
4	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 철도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변경(강화) ㅇ ‘철도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’과 ‘열차역사 혼잡도 실시간 측정 데이터’를 위험도 평가를 위해 사전에 조사해야 하는 안전 정보에 추가 ▶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제3조 2. 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 변경(강화) ㅇ 열차·역사 혼잡도가 ‘심각’ 단계 이상인 경우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 ㅇ 열차·역사 혼잡도가 철도비상사태에 해당하면 부분 연습·훈련을 연1회 이상 시행 ▶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제3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(신설) ㅇ 의약품공급자등이 작성한 지출보고서 내역을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등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공개 ㅇ 공개하는 지출보고서 중 영업정보 등은 복지부장관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의료인 등은 공개 대상이 된 지출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약품공급자등에게 정정 요청 가능 ▶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4	1.중요
6	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(신설) ㅇ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작성한 지출보고서 내역을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등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공개 ㅇ 공개하는 지출보고서 중 영업정보 등은 복지부장관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의료인 등은 공개 대상이 된 지출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자등에게 정정 요청 가능 ▶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4조의2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(교육부)	1. 대학 등의 연구윤리 자체 규정 마련(신설) ㅇ 대학등에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할 때, 교육부 지침 내용을 충실히 반영 ㅇ 대학등에서 제정하는 자체규정의 적용 대상을 대학 등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연구자, 직원, 학생 등으로 명확화 ▶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0조 2. 대학 등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(신설) ㅇ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▶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9조 3. 예비조사위원회의 신설(신설) ㅇ 예비조사는 착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원칙이되, 기간내 조사가 어려울 경우 기간 연장 가능, 예비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▶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0조 4. 이의신청 시 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형태(신설) ㅇ 이의신청을 통한 재조사 시 예비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예비조사위원회 형태로, 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조사 위원회 형태로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 ▶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6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(행정안전부)	1. 전입신고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 설정 및 신분증 제출의무 부과(강화) ㅇ 전 세대주와 현 세대주가 다른 전입신고를 할 경우, 반드시 전입자의 확인(서명 또는 인)을 받도록 하고, 전입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함 – 단, 가족관계증명서(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)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전입신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 확인되면 신분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▶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2. 주민등록신고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 설정 및 신분증 제출의무 부과(강화) ㅇ 주민등록신고시 ‘확인이 필요한 사람’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함 – 단, 가족관계증명서(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)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전입신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 확인되면 신분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▶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발생시설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(신설) ○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발생시 처분기준 마련(위반차수 또는 위반유형에 따라 개선명령, 시설장 교체, 시설폐쇄 처분) ▶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	1.비중요